생통포럼(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 포럼)

7기 1년, 문화도시 광주!
제대로 가고 있나?

□ **일시 : 2019년 6월 26일 (수) 오후 3시**

□ **장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 **주최 :** , 광주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

□ **주관 :** 진도북(춤)놀이보존회 내드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사)광주장애인문화협회, (사)광주장애인미술협회, (사)오월어머니집, 극단 연인,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사)대동문화재단, (사)윤상원기념사업회, (사)광주마당, 광주영상위원회, (사)청년문화허브, 오로지스튜디오, (협)플리마코, 만렙기획, 안다미로, 청년파티그룹 와이트랩, 문화기획단 유별라, r.changer, 버틀러스코리아, 잇다, 청년미래전략센터, 전남홍보단, 와사비, 제인도우, 파크인터네셔널, 오월문화기획단 달.Comm, 한국민족극운동협회

□ **후원 :**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 프로그램

사 회 : 송진희(호남대학교 예술대학장)

발 표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 론	박 향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패 널	정진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박홍근 (나무심는 건축인 운영위원장, 건축사)	이현미 (광주민예총 사무처장) 윤준혁 (상상넷 사무처장)

■ 목 차

1. 발 표 (1) 박호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 05

2. 발 표 (2)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19

3. 토 론 (1) 박 향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 39

4. 토 론 (2)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 47

5. 패 널 (1) 정진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 59

6. 패 널 (2) 이현미 광주민예총 사무처장 ---------- 63

7. 패 널 (3) 박홍근 나무심는 건축인 운영위원장 ---------- 66

8. 패 널 (4) 윤준혁 상상넷 사무처장 ---------- 70

발표문 :

광주시 문화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꿈꾸며

박 호 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광주시 문화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꿈꾸며

박 호 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1. 문화정책의 새로운 동향

문화의 세기라고 불리는 21세기 진입 이후 주요 선진국의 문화정책 동향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술(Art)을 위한 정책에서 문화(Arts) 전반에 걸친 정책으로의 확대라고 정리할 수 있다.

미술을 중심으로 음악·연극·무용·문학·미술 등 정통적인 예술을 장려하거나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을 주축으로 한 종래의 정책에서 그러한 분야는 물론 지역에 뿌리를 둔 민속적인 문화나 새로운 대중문화, 미디어 문화, 생활 문화 등도 주요 대상으로 삼는 정책으로 크게 전환한 것이다.

이것은 예술정책에서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변화는 각 국가별로 추구하는 지향점이나 운영하는 정책 집행체제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 **예술가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 장려 지원**
▲ **문화의 보급과 일반인의 문화 활동에 대한 참가기회 확장**
▲ **지역문화 활성화**
▲ **문화 분야 인재 양성과 교육**
▲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 **문화의 국제교류와 국제협력**
▲ **문화시설 및 문화 관련 제도 등 기반 정비**

1) 영국의 문화정책 (2016 문화백서를 중심으로)

영국 문화정책은 ▲어느 환경에서 태어나든 모든 사람은 문화에 대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지역사회 균형성장을 위한 문화혜택 확장 ▲ 문화를 통한 영국의 국제적 지위 격상 ▲기금 확장을 통한 지속투자 시스템 강화 등을 주요 관점으로 심고 있다.

우선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서 문화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열악한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 시민 프로그램 추진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열악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어린 학생 대상 Pupil Premium Awards 시행, 예술분야 전문가 육성을 위한 예술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한 학생들의 재능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견습생 활용 지원을 위한 전략 수립, 소수민족, 장애 어린이들의 문화 부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역할 강화, 어린이 · 청소년들의 문화유산 교육 기회 확대 등이다.

문화적 풍요로움을 지역사회 혜택으로 환원하자는 정책은 주로 기금 확장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 예술위원회와 문화유산 복권 기금(Heritage Lottery Fund)과의 협업구조를 통해 정책의 동력이 마련된다. 특히, 영국의 복권 기금 활용의 특별한 점은 복권 유통업자들과 지역 문화 기관과의 협업이 일대일 방식으로 직접 연계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역사적 장소 개발 지원도 주요 정책이다. 유서 깊은 건물 활용을 위한 지속적 지원, 문화 활동을 위한 유휴 공간 활용 지원 등이며, 영국만의 독특한 정책 하나는 지역에 있는 오래된 교회 건물 재건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다.

문화력은 국가의 국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는 원칙 아래 영국은 최근 들어 문화 수출 프로그램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셰익스피어 작품과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지원, 인도,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와 문화 교류 확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영국의 문화 브랜드 업 정책은 자국 문화의 수출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3천만 파운드 기금을 통해 세계 문화유산 보호와 재건에 공적 기여를 함으로써 영국문화 세계화의 기반을 닦아가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 투자도 영국 문화정책의 주요한 특징이다. 2017년부터 박물관과 갤러리에 대한 전폭적인 세금 감면을 시행중이며, 박물관과 갤러리 개선 기금을 위해 2백만 파운드를 추가 투자했다.

크라우드 펀딩 파일럿 계획 시행을 위해 'Commercial Academy of Culture'를 설립했으며 펀딩 다양화를 위한 예술위원회와 문화유산 복권기금과의 협업 시스템 장착, 기부금 혜택 확대 정책 등을 추진 중이다.

2) 독일의 문화정책(2018년 문화예산을 중심으로)

연방국가 독일은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연방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국외 문화정책도 연방주의를 고수할 정도다. '다른 외국 국가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연방의 업무'라고 규정한 기본법 32조 1항에 의거해 연방정부에서 담당한다. 물론 연방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기구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문화정책도 당연히 연방주의 중심으로 운영된다. 예술과 문화가 기본적으로 주의 소관임을 기본법에서 명기(기본법 30조)하고 있으며, 이를 문화 다양성 추구의 일환으로 간주함으로써 각 주들은 문화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의 소임 아래 주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추구한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통합 문화정책 관리 역할이 방기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 주들은 문화정책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공동 기구로 '주 문화장관 상설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총리실 산하에 BKM 이라는 정책 담당 부처도 설립됐다.

BKM은 내각이 아닌, 문화 및 미디어 관련 업무에 대해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 관련 시설과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문화 프로젝트 후원, 예술과 문화의 지속적 발전과 개선 지원 등이 BKM의 주요 임무이다.

BKM의 산하기관으로는 연방기록물보관소, 동유럽에서의 독일인의 문화와 역사를 위한 연방연구소, 독일연방하원 문화와 미디어 위원회, 독일의 문화 연구위원회, 연방 문화재단이 있다.

독일의 문화 예산은 해마다 증액되고 있는 추세다. 독일 연방정부가 2018년 문화정책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16억7000만 유로(약 2조1740억 원)로 지난해보다 약 3억1200만유로 (약 4061억7000만원) 증가했다.

2005년 앙겔라 메르켈이 연방 총리를 맡은 이래 지금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문화 예산은 6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독일 문화부 장관인 모니카 그뤼터스(Monika Gruetters)는 "2018년 문화 예산이 증가한 것은 아주 중요한 신호다. 문화의 전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니카 그뤼터스는 예술과 문화가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문화 지원을 통해 독일의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적인 정체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예산안을 분석해보면 독일의 전통 문화 보존 및 강화 사업(문화재 보호법, 영화 유산 디지털화, 클래식 음악, 연극, 문학 등 전통 고급문화 지원)과 다문화 지원 사업(독일 국영 방송 지원, 다문화 미디어 및 기관 지원)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사회적 현안들을 문화정책을 통해 풀어내려는 의지가 엿보이기도 한다. 국영 홍보 방송인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독일의 소리)' 지원금이 2,570만유로 증액,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랍어와 터키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계속 기획, 제작한다. 다문화 지원을 위해 이슬람 극단주의와 이에 따른 반 이슬람 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예방 프로

그램을 위해서 문화와 미디어 분야 예산이 새로 책정되었고, 문화적 통합과 미디어 사용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에 650만유로가 쓰일 예정이다.

중동 출신 학생들을 위한 음악 교육 기관인 '베를린 바렌보임 사이드 아카데미'에 670만 유로를 지원한다.

3) 프랑스의 문화정책(문화매개자 역할을 중심으로)

문화매개(cultural mediation)라는 용어가 처음 탄생한 곳은 프랑스이며 '문화매개' 는 1959년 문화부가 출범한 이래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프랑스 정책노선인 '문화민주화' 실현의 중심에 있다.

현재, '문화매개' 활동을 담당하는 인력은 '문화매개자'로 불리며 프랑스 문화유산의 보호와 발전, 더 나아가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문화매개자의 역할은 문화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가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다.

'문화민주화' 실현을 위한 '문화매개' 개념은 인류의 주요 작품과 프랑스의 문화유산을 가능한 한 많은 프랑스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 문화부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없이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둔 '문화민주화' 정책을 펼쳤다.

1961년부터 프랑스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문화의 집'과 문화예술행사 무료입장 및 할인제도 등은 '문화민주화'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문화예술 접근성이 떨어졌던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 외곽 주민들이 언제든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문화민주화'의 원칙에 따라 엘리트계층이 향유하던 고급문화예술을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소외계층들에게 친숙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아 외면을 당하였고 오히려 기존에 이를 향유하던 소수계층만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어 오히려 문화적 불평등을 가중시킨 양극화의 벽에 부딪혔다.

결국 고급문화 중심의 일방적인 공급이 아닌 모든 사람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문화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의 기능이 강조되었으며, 이와 함께 기존의 '문화민주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문화매개' 정책이다.

'문화매개'는'문화민주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작품과 관객이 만나는 방식에 중점을 둔다. '문화민주화' 측면에서 작품과 관객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둘 사이의 만남을 뛰어넘어 관객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매개 활동을 강조한다.

문화예술과 대중을 이어주는 역할이 강조되는 문화매개자 정책은 프랑스 정부와 예술인들의 수십 년에 걸친 고민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문화매개자'의 직무는 프랑스 문화부 출범 이래, 문화부를 대표하는 정책적 노선으로 자리 잡은 '문화민주화'가 추구하는 그 이상 실현의 중심에 있다.

<총론>

▲ 각 국의 문화정책은 공동체의 철학을 담고 있다.

- 영국 : 문화혜택의 기회 균등을 위해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집중 및 지역문화 균형성장 추구

- 독일 : 국외 문화교류까지 지역 연방정부가 수행할 정도로 지방정부 중심의 연방주의 원칙 고수

- 프랑스 : '모두를 위한 예술'을 가치로 문화민주주의 원칙에 입각, 문화예술과 대중을 잇는 역할이 강조되는 문화매개자 정책 추구

▲ 한국, 그리고 광주가 추구하는 정책 철학은 무엇인가?

2. 'More culture, Better Gwangju'를 위한 제언

1) 시민사회, 문화예술단체 집담회 도출 의견(4월 17일)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현주소, 그리고 개선방안/광주문화도시협의회

-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 시민의 참여와 협치에 기반을 둔 조성사업 추진
- 아특법 시효기간 및 종합계획 목표연도 연장
- 문화전당 조직 일원화 및 전문인력 충원
- 조성사업 재원구조 현실화와 안정적인 재원 투입
- 도청 원형복원과 문화전당과의 조화(공간, 역할 등)
- 조성사업 추진 과정과 전당운영에 있어서 광주시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② 광주시 문화정책 분석 및 개선안 (민예총)

< 아시아 문화전당 >

- 전당의 극장화, 갤러리화 우려
- 예술의 친절한 매개자적 역할 확장
- 광주라는 장소성이 지닌 아시아적 정체성을 발현해 아시아 권역과 실질적인 문화적 공감을 이뤄낼 수 있는 핵심 개념 장착 필요
- 민주평화교류원의 역할 확장
- 민간 전문기획자 창의성 수용 시스템 필요

< 정보문화산업진흥원 >

- '문화의 경제적 자원화' 역할에 입각, 시민사회의 총체적인 역량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소통구조 절실
- 기존에 축적된 콘텐츠의 활성화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수시로 자기 점검, 생산성 혁신 시스템 갖춰야
- 공연, 축제 등 수행 역할을 지양하고 CT산업에 집중해야 함

< 프린지 페스티벌 >

- 페스티벌 개념 재정립 필요(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프린지페스티벌이 시민향유 거리축제에 머물면서, 충장 축제 등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소모성 축제로 전락했다는 평가) *아시아의 에딘버러
- 아시아문화전당, 동아시아문화도시 등 기존 네트워크와 적극 결합 필요(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콘텐츠 파견, ACC는 바이어 역할)

<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

-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핵심 관점인 관련 예술교육, 시민 마인드 조성, 관련 국제교류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확장시키는 체계적인 사업 운영 계획 마련돼야
- 정체성 모호한 축제들을 정리하고,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페스티벌을 창안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이미지를 글로벌화 하는 전략 필요

< 시민문화 향유와 시민문화예술 진흥 >

- 향유 중심의 사업 운영은 문화중심도시 광주라는 시민사회의 인문적 역량 축적에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도시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시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대폭 강화, 문화중심도시 '시민다운' 역량 확장에 정책 집중도를 높여야 함
- 시민 문화공간을 다핵화 하고 융복합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적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문화수요 혁신 맵핑이 필요함

<총론>

▲ 광주시 문화정책의 철학은?

▲ 문화재단의 '문화 도매상 역할' 그대로 둘 것인가?

▲ 주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인프라 '소규모 다핵화 활용 방안' 고려해볼 만한가?

▲ 문화정책의 개방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3. '철학·균형·지속성장' 문화중심도시 광주

1) 정책 철학

문화는 'more culture, better society' 라는 궁극적 개념을 지향한다. 보다 나은 사회를 견인하지 못하는 문화가 인류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 명제는 일정 도시의 문화와 삶의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적용 될 수 있는 일반론이다. 문화정책에 철학이라는 중심개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모든 재원은 유한하다. 이 불가피한 경계 때문에라도 정책은 지향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합리와 실용이 핵심인 경제성장 부문조차 각각의 성장론을 내세우며 다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문화정책도 마찬가지다. 막대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선진 부국들도 문화예술 정책에서 분명한 정책 타깃을 찾는다.(문화예술교육, 지역 중심, 문화민주주의 등)

그러나 광주시 문화정책의 지향점을 물었을 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슬로건을 제외하고는 즉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물론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문화선진국, 모든 문화 선진도시들이 겪어 온 난제다. 혼란과 방황 끝에 제 길을 비로소 찾는 인생의 여정과도 닮아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세련된 문화정책을 갖게 국가들 역시 시행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지금의 제 자리를 찾았다.

이제 광주시의 문화정책도 지향점을 장착시킬 국면에 이르렀다.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인가? 문화 민주주의인가? 주민 생활문화 활성화인가? 글로벌 문화 창의도시인가? 여러 가지 담론을 두고 활발한 토론이 개진될 수 있을 것이다.

2) 균제

도시의 문화정책은 크게 4가지 정도의 대 주제로 나눠볼 수 있다. 창작, 향유, 문화기반 조성 및 구축, 그리고 문화산업이다.

창작은 예술창조를 위한 투자이며, 문화기반 조성은 문화성장을 위한 원동력을 축적해가는 일이다. 문화산업은 말 그대로 콘텐츠와 산업논리를 접목시켜 지역경제를 살찌워보자는 전략이다.

이 4가지 것들은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 논리처럼 균제가 필요하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면 문화도시의 전체 성장 에너지가 허비되거나 총체적 성장 역량이 내재화되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기 십상이다.

문화는 또한 계량하기 힘든 전인적인 측면을 지니기에 한두 가지 요소의 충족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테면 예술가의 창조행위도 활발해야하고, 문화소비를 통한 선순환 문화 유통구조도 중요하며, 문화로 먹고 사는 문제도 도외시 할 수 없으며, 문화를 통한 공동체의 인문기반 조성도 빠트릴 수 없는 가제다.

예컨대, 문화기반 조성의 핵심 키워드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상황에서 축제나 이벤트와 같은 문화향유의 영역에만 정책을 집중한다면 문화도시, 인문도시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 소모되고 고갈될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근래 광주시의 문화정책은 안타깝게도 축제나 이벤트에 맹진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도시축제는 도시 성장 측면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도시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 열기와 밀도

를 탐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도시 성립의 원형질적인,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시 문화축제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신체의 어긋난 성장처럼 도시 문화를 결국 병들게 한다. 제한된 예산 속에서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할 타 분야에 대한 정책 투자를 궁핍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 형적 성장 구조는 고른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약한 줄기에 결실 없이 키만 껑충 자라다가 결국엔 땅위에 눕고 마는 식물의 명멸과 닮아있다.

광주는 축제가 넘치는 도시라는 정의에 반론을 제기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프린지 페스티벌, 충장 축제, ACC 프린지, 국제청년축제, 예술의 거 리와 대인시장 프로그램 등 숱한 시민향유 페스티벌이 거리에서 펼쳐진다. 이런 저런 축제들로 인해 금남로가 차단되는 일수가 1년 중 한 달을 훨씬 넘어섰다.

프린지페스티벌의 경우 20억을 넘는 예산을 거리 축제에 쏟는다. 이 불균형 속에서 사람 북적대는 야시장으로 변해버린 대인시장의 작가들은 창작의 터전을 잃었거나 예술 소품 셀러로 나섰으며,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 교사들은 1만원을 넘지 않는 문화예술 체험거리를 찾느라 비지땀을 흘린다.

시 정책이 그러하다 보니 공공기관들도 닮은 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집중해야 할 문화재단도 축제나 이벤트에 몰입하는 왜곡된 행태가 갈수록 빈번해진다. CT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조차 음악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대폭 줄이고, '사직 뮤직 페스티벌'개최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왜 그러는 것일까? 문화행정의 다급한 욕망이 자초한 일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겉멋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여주기 행정, 사람 모아내기 행정, 단체장의 정치적 레토릭 등이 그 욕망 속에 복잡다단하게 비벼져있다.

축제의 도시라는 닉네임으로 아시아문화중심 도시가 될 수는 없다. 물론 축제로 성공한 세계적 도시들도 있다. 이런 도시들은 대부분 문화도시 이전에 세계적 관광도시로 자리 매김 된 도시들이다. 문화도시 광주가 나아갈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문화도시 미래를 위해 한 장의 벽돌도 쌓아질 수 없는 일회성 축제로 덤벙댈 일이 아니라, 인문도시 광주답게, 개성 있게, 우리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는 길이다.

문화행정가들은 또한 그러한 개성적인 지향 점들을 실현하기 위해 '대중과 예술을 잇는 '전문적이고도 성실한 매개자 역할을 최고의 본분으로 삼아야 한다.

3) 지속성장

문화예술 부문에 관련된 지속성장은 창의적 콘텐츠의 확보, 콘텐츠들을 수용하고 소비하는 수요 기반, 그리고 그러한 기반을 항구적으로 구축해가는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이미 대인 예술 야시장이 인파를 모아내는 이면에서 예술시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예술가들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시장을 떠난 스토리, 정부와 시정부의 지원금에 의해 해마다 예술의 거리 프로젝트가 펼쳐지지만 예술을 매개로 한 상인들과 입주 작가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상황들을 지켜보며 지속성장의 에너지가 어떻게 길러져야 하는지를 실감하고 있다.

공공예산은 텃밭에 잠재된 에너지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편이다. 보조금은 기획서 잘 쓰고 실적 좋은 단체들의 사냥감이 된지 오래고, 아시아문화전당 프로그램 또한 획기적 조어를 차용한 첨단 프로그램이 아니면 설 자리가 없다.

도시재생사업 또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칭을 내세우고 있지만, 볼거리, 기반 정비 위주로 치닫다보니 공동체의 문화적 활력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프로그램은 보기 드물게 됐다.

질 좋은 공연들이 공공 지원에 의해 수시로 펼쳐지고 있지만, 예술의 진면목과 대중의 공감을 잇는 매개 역할의 부재로 양극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끼리끼리 즐기는 전근대적인 살롱 문화가 갈수록 만연해가고 있다.

마치 밑받침이 없는 허공에 매달린 줄을 안간 힘을 쏟으며 잡고 오르는 위기적 양상이다. 정녕 비상구는 없을까? 있다. 피폐해 보이지만, 희망은 현실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게 불문율이다.

<총론>

▲ 최근 각양각색의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을 깊이 살펴보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니고선 콘텐츠가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 지속성장의 핵연료이자 미래의 문화 창조자이며 소비자이기도 한 어린 세대들이 문화체험의 향기를 흠뻑 들이킬 수 있다는 현상은 고무적이다. 보다 많은 정책이 이러한 현상의 활력에 투자돼야 한다.

▲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이 넘쳐난다. 말 그대로 문화기획 잘하는 사람을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됐다. 취약한 문화 소비로 문화 프로그램이 활력을 잃고 시들어 가는데 이렇게 양성된 문화기획자들이 살아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 문화기획자 양성은 이제'꺼리'의 창안이 아닌, 문화예술과 대중을 잇는 패러다임을 고안하는'브리지 전문가'양성으로 타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밀실의 기획자가 아닌 문화유통과 소비의 광장을 여는 매개자 기능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발표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지역적 전환' 과 광주시의 과제들

김 기 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지역적 전환’과 광주시의 과제들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 왜 ‘지역적 전환’인가?

2017년 대선 기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가 정식화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이행 과제로 ‘문화전당 활성화’와 ‘7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 강조되면서 그동안 아시아문화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 전반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의 핵심은 사업의 ‘정상화’이다. 정상화는 조성사업의 원래 취지와 목적을 회복하고, 변화된 문화적 환경에 따라 사업의 내용, 추진 방식과 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사업의 동력과 실행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상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사업 추진 기구 및 사업 축소, 문화전당의 기능 정체, 국가사업이 아닌 지역사업으로 의미 축소, 중앙과 지역 간 협력 약화 등 조성사업의 위상 약화와 사업 부진에 대한 근본적 재조정을 전제로 한다.

그동안 국가와 지역이 서로 비대칭적으로 불균형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온 조성사업을 지역의 관점에서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적 전환’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적 전환은 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을 정상화 혹은 재활성화하자는 효율성 측면의 기능적 목적이 깔려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문화도시 프로젝트가 지향하고자 했던 원래의 이념과 목적을 재정립하기 위해 광주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사업을 인식하고, 지역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립하자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지방분권과 자치가 강조되고 있는 정치적 상황은 문화 분권과 문화자치를 새로운 이슈로 부상시켜 놓았다. 이에 따라 지역과 협력적 관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문화사업을 지역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조성사업의 종료 기한이 5년 정도 남은 현재의 상황은 문화전당의 효과를 광주 도시전역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조성사업이 서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광주시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조성사업의 주도적 주체로 나서야 할 때다. 현재의 조성사업을 둘러싼 새로운 국면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의존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개입력과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2. 조성사업의 진행 현황

2004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까지 진행되는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임에도 과거 보수정부의 무관심, 사업의 의미와 규모 축소 등으로 문화전당 건립을 제외하고는 다른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1] 문화전당의 효과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5대 문화권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전체 사업비(2004~2023년, 5조2,912억 원) 대비 2018년까지 집행된 예산은 1조4,528억 원으로 계획 대비 27.5%만이 투입되었다. 문화전당 개관 이후 문화전당 운영 예산의 지속적인 감소도 뚜렷하다. 2015년 1,012억 원, 2016년 638억 원, 2017년 610억 원, 2018년 616억 원, 2019년 573 억 원이다. 원활하지 못한 예산 지원과 인력 부족 등으로 특화된 창제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 문화전당 활성화로 개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큰 상황이다.

조성사업 중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인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의 분야도 최근 3년 평균 국비 반영률이 45%로 낮은 형편이다. '아시아문화도시중심조성 종합계획'에 의거해 2019~2023년까지 투자되어야 할 국비는 1조4,976억 원이다.

지역사회는 조성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규 사업 반영 확대 및 계속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증액 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다. 또한 아특법 48조(시행령 38조)에 따라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비율을 7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1) 문화전당 건립·운영에 투자되는 전체 예산은 1조 6,872억 원(국비 13,872: 민자 3,000)이고,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지자체 사업은 3조 6,040억원(국비 13,807: 지방비 7,896: 민자 14,337)임,

<표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재원별 투자 현황(2018년 12월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전체계획('04~'23)	52,912	27,679	7,896	17,337
집행('04~'17)①	13,462(25.4%)	11,987(43.3%)	935(11.8%)	540(3.1%)
집행('18)②	1,066(2.0%)	716(2.6%)	167(2.1%)	183(1.1%)
집행('04~'18)①+②	**14,528(27.5%)**	**12,703(45.9%)**	**1,102(14.0%)**	**723(4.2%)**

* 광주시 내부 자료.

<표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4대 역점 과제별 재정 투입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투자소요(2004-2023)				집행액(2004-2018)				집행비율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집행 비율)	52,912	27,679	7,896	17,337	14,528 (27.5)	12,703 (45.9)	1,102 (14.0)	723 (4.2)	
1. 문화전당 건립 운영	16,872	13,872	-	3,000	10,999	10,999			65.2%
2.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17,259	5,451	4,695	7,113	440	232	208		2.5%
3.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 산업 육성	14,467	6,123	2,302	6,042	2,637	1,105	809	723	18.2%
4. 문화교류 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	4,314	2,233	899	1,182	452	367	85		10.5%

* 광주시 내부 자료.

조성사업은 초기 기획단계에서 정립한 비전과 방향을 갖고 15년 동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세 번 바뀌면서 조성사업의 의미, 규모, 추진 방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사업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발생하고, 핵심사업에 대한 공유가 부족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국책사업을 주관하는 국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

지역 내부에서는 사업을 자기 관점으로 수용하려 들면서 일관된 사업 진행보다는 다양한 갈등을 야기시켜 놓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를 내걸고 조

성사업 정상화와 활성화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만한 가시적 성과나 뚜렷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18년 8월에 발표된 '종합계획 제2차 수정계획'에도 정부의 결단 없이는 조성사업이 활성화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기 구상한 조성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 방향을 재조정했다.

<표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조성 방향

주요 조정 방향	주요 사업 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의미 반영	조성사업 정상화, 문화전당·7대 문화권 활성화, 아특법 개정 등
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및 실질적 효과 확산	조직운영 효율성 증대, 콘텐츠 창·제작 기능 강화, 지역 협력사업 확대
문화전당 효과 확산을 위한 5대 문화권 재설정	기존 7대 문화권 통·폐합 및 재조정으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분야 현실성 재고
4차산업혁명 대비 사업의 새로운 방향 마련	과학술 친화적 문화예술 기반 조성, 범용기술·예술융합 연구개발 구축
광주시 주요계획과 결합을 통한 시너지 제고	지역문화예술진흥정책, 도시공간계획 사업과 상호 연계
문화협치로 추진체계 강화	문체부-광주-시민사회 간 협력과 지역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 재구성.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조성사업의 남은 기간의 과정을 2단계로 조정하여 각각의 단계별로 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단계(2018년~2020년): 성숙단계	2단계(2021년~2023년): 정착단계
- 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 - 5대 문화권 조성사업 정상화 - 문화관광산업의 성숙 및 문화교류의 활성화	- 문화전당 운영 정착 - 5대 문화권 조성 및 문화도시 기반 조성 - 예술의 발전 및 문화관광산업의 고도화, 아시아 문화교류 중심지로의 도약

3. 조성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

1) 종합적 평가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광주시는 국가사업이라는 성격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인 문화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협치에 기반해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2)]

특히 2005년 이후 문화전당의 건축 설계가 발표되고 발생한 랜드마크 논쟁 국면, 아특법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국면에서 지역적 관점에서 조성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정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광주시-광주시의회-광주예총-지역 상인들'이 연결되어 문화전당이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로 지어져 관광객을 유인하는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담론을 강하게 지지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조성사업의 이념과 가치를 훼손한 적은 없는지, 문화도시 관련 사업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등을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행정 인력의 안정적인 재생산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문화행정시스템 정비뿐만 아니라 시민이 조성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광주시의 중요한 역할이다.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 단위 협의체기구인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광주시가 조성사업 과정에서 보여준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획과 추진도 문제였다.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문화도시 담론과 정책 영역은 양적으로 대폭 확대되었지만, 광주시는 조성사업에 대해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상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기반의 지역문화정책 및 행정 리더십 형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시가 지역차원의 지역문화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정립하지 못하고 이를 조성사업으로 대체하려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게 했다.

특히 2009년 아특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광주시의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계획적인 대처와 재정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못했다. 연차별 계획은 광주라는 도시에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성사업의 주요 영역 중의 하나이다.

---

2) 이런 점에서 아시아문화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는 그동안 광주시는 "전략 부재 및 지역사회의 협치에 기반을 둔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2019. 4. 17; 9).

민선 6기 '문화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 민선 7기 '광주다움'과 '품격 있는 문화도시' 등의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이념과 체계적인 실행 계획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문화도시 광주를 위한 공적 의무 주체인 광주시가 조성사업을 지역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의지와 정책적 구상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냉정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2) 민선 7기의 성과와 한계

제13대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당선인의 광주혁신위원회 보고서(2018. 6. 30)는 그동안 진행된 조성사업에 대한 진단과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 분과가 진단한 조성사업의 핵심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성과가 미흡했고, 핵심시설임에도 정부기관임을 강조하면서도 지역사회와 소통이 부족했고, 사업비(5조 2,912억원)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1조 3,462억원, 25.5%)/7대 문화권 추진성과는 총사업비 1조 1,188억 원의 16.2%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광주혁신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방향과 실행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전당 운영을 위한 광주시의 역할 강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내에 (지역)자문위원회 설치(특별법시행령 제29조 4항에 근거) - 전당장 임명에 시장의 의견 청취 조항 추가 등 지역사회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는 방안 추진(특별법 제27조 제5항에 근거한 시행령 마련) - 아시아문화원의 이사 및 자문위원회에 지역사회 및 광주시의 참여(당연직, 아시아문화원정관 제7조 및 아시아문화원자문위원회운영규칙 제4조 개정)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자문위원회에 지역사회 및 광주시의 참여(당연직, 아시아문화전당기본운영규정 제11조에 근거) - 아시아문화전당 및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둘러싼 적극적인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중재(시-전당-시민사회와의 소통창구 마련) - 특별법상 예정된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조직일원화(2020년4월)에 대비, 문화전당 운영체계에 대한 지역사회 내 논의 추진 및 결과 반영 ○ 문화전당 본연의 역할 강화 및 지역협력 확대

- 아시아성과 동시대성 등 설립 목적에 부합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문화발전소이자 실험적 복합문화기관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
-> 전당의 정보수집과 연구, 콘텐츠 창·제작, 전시공연, 유통 등 선순환 구조 정착
- 5·18정신, 광주스토리 등 지역성을 반영한 문화콘텐츠 확장을 위해 노력
-> 문화콘텐츠 창·제작 과정에 지역대학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기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광주시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전략과 연계
- 문화전당의 국제문화교류사업과 연계한 광주시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 문화전당 활성화와 연계한 5대문화권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 문화적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5대문화권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 수정된 5대문화권조성사업의 종합계획 반영과 이에 따른 안정적인 국비 확보
- 당초 조성계획에 포함되었으나 그동안 추진이 미흡했던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사업, 문화교류도시 역량강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성과 가시화
- 문화전당과 연계한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시 전역으로 성과를 확산하는 방안 모색

위와 같은 방향과 과제들은 민선7기 광주시가 수용해 확정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이 민선7기 신임 시장에게 제안한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들은 그동안 조성사업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가 실행해야 할 과제들이라 할 수 있다. 아쉬운 것은 이와 같은 사항이 민선 7기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만, 문화전당과 지역사회 협력은 2014년 만들어진 광주시-문화전당 간 정례협의회의 활성화와 문화전당의 지역협력사업의 확대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9년 2월 발표된 광주시의 "'품격 있는 문화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문화정책 추진방향"은 민선 7기 광주시 문화정책의 방향과 핵심사업을 제시한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2018년 광주시 문화정책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문화경제부시장 직제 신설'과 '통합적 문화행정 추진', '광주시-문화전당-유관기관 간 문화정책과 행정의 협력·협업체계 구축' 등을 꼽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문화전당 내 '문화도시조성 협력단' 구성(2018. 6),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 운영 및 복원연구 진행(2018. 8월~), 옛 전남도청 복원전담팀으로 복원 관련 업무 이관(2018. 11.12.)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성과들은 원래 의도했던 "문화정책 구상단계에서부터 지역문화·예술계 간 원활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선순환적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 시각에 입각한 컨트럴타워 구축"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는 보다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품격 있는 문화도시 광주" 계획에는 '시민 주도의 문화행정 협치' 활성화를 지향하지만 시민사회와 협치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나 장치에 대한 구상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계획이 갖고 있는 위상이나 의미로 보았을 때 조성사업 2.0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광주시 차원의 사업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었어야 했다.

4. 조성사업의 지역적 전환을 위한 과제들

조성사업은 국가와 지역 간의 역할 분담과 책임 영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와 지역이 조성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지점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의 책임성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조성사업은 문화를 통해 지역의 삶을 재조직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역적 전환의 관점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지역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문화정책 차원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추진원리로서 문화거버넌스의 재구축

조성사업은 국가가 주도해 기획하고, 국가의 예산을 통해 집행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이 실현되는 구체적 공간은 광주 지역이다. 처음부터 서로의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사업 구조이다.

그러나 조성사업에서 항상 논쟁이 되었던 것은 '지역과의 협력' 문제였다. 이는 사업주도 주체인 문체부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소극적이었고, 문화전당 운영을 폐쇄적이고 권위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거버넌스의 작동 원리인 '협력'은 사업 추진의 유용한 수단이자 문화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요 원리이다. 아특법에는 국가, 지방정부, 시민사회,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망의 구성과 운영을 강조하는 문화거버넌스 원리가 담겨 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과정에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개방적인 정책 조정 과정을 통해 사회협약을 이끌어 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특법에서의 문화협치의 의미는 조성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등은 조성위원회 ↔ 중앙정부 ↔ 광주광역시 ↔ 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139).

광주시와 문화전당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중 '정례협의회'는 "광주시-문화전당 간 협업프로그램 공동 발굴 및 행사운영으로 상시협력 체계 유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상층 단위의 협력 장치이다. 최근 정례협의회의 운영 과정을 보면, 협력의 틀이 지속되고, 협력의 내용 면에서도 실질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례협의회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19회를 운영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회(11, 12월), 2015년 5회(1, 3, 6, 7, 11월), 2016년 1회(9월), 2017년 5회(2, 8, 9, 11, 12월), 2018년 5회(3월, 4월, 6월 5일, 6월 29일, 9월 11일) 등이다. 2018년 협의회에서는 '워터슬라이드 운영', '아시아문학인 교류의 장', '광주비엔날레', 'ACC CITY RUN' 등의 협업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도 했다. 그밖의 협력으로 문화전당 내 '문화도시조성 협력단' 구성(2018. 6),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 운영 및 복원연구 진행(2018. 8월~), 옛 전남도청 복원전담팀으로 복원 관련 업무 이관(2018. 11.12.)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화거버넌스의 인식과 실행의 지평은 매우 협소하다. 행정차원의 거버넌스는 가동되고 있지만, 지역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포괄적 범위의 거버넌스는 구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특법에 규정된 '시민사회협약위원회'는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이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된 적이 없다. 이 시민사회협약위원회가 연차별 실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것도 근본적으로 되돌아야 봐야 할 일이다.

앞으로 조성사업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다음의 사항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그것은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현재의 규정대로 연차별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의 위원회로 구성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 거버넌스 구조로 확대 재편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광주시는 '시민 주도의 문화행정 협치' 활성화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조성사업 영역에서도 포괄적인 거버넌스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규정된 광주시의 책임 있는 역할, 즉 "문체부, 문화전당, 지역문화예술 단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문화협치체계를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괄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특법의 규정도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아특법의 시민사회협약위원회는 연차별 실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다. 문제는 시민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아특법과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시민사회협약위원회 활동은 연차별 실시계획만이 아니라 옛 전남도청 복원, 4대 역점 추진과제 등 폭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특법의 규정과도 다른 상황이다.

그동안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거버넌스는 주체 간의 권한이 균점되지 않고 숙의와 토론이 결핍되어 있었다. 또한 정책과정에 한정된 행정 주도의 위계적 파트너십이 주된 형태였다. 문화거버넌스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기능적 관점만을 중시하면 주로 행정이 원하는 성과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든다면, 2019년 4월 광주시 주도로 구성된 '광주 문화·경제거버넌스 포럼'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통합적 관점의 문화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취지에서 출범한 포럼은 문화와 경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일견 의미 있는 구성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행정 단위의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시민참여에 기반한 문화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협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자 수단적인 방법이지만,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가치를 갖는다. 조성사업에서 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성사업과 문화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의 활성화이다. 광주시는 협력의 지속과 진전은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공감, 소통, 참여를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장치를 현실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조성사업 활성화와

조성사업 종료 이후 문화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계가 참여하는 시민협력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지역적 전환'의 주요 영역이다.

2) 문화전당 운영 조직의 재구축

2020년 4월은 아특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문화전당 운영을 '일부위탁'에서 '전부위탁'으로 결정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 4월부터 문화전당 성과평가 및 조직개편 등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조직 통합 등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의 정황을 보면, 문체부는 용역을 통한 성과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법인화를 통한 조직의 일원화 방식으로 문화전당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문화전당 운영주체를 법인으로 일원화한다면, 콘텐츠 창·제작 예산 등의 국비예산 감소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문화전당은 공공성이 강한 창·제작, 교류협력 등을 위한 문화발전소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당장을 정무직으로 하는 국가기관으로 하고, 수익사업 등이 필요한 부분만 아시아문화원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문화전당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첫째, 문화전당이 2015년 개관 이후 조성사업의 핵심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조직운영 기반을 구축해 왔는가의 문제이다. 문체부의 법인화 결정은 개관 이후 5년 동안 문화전당이 조직운영의 자립적 기반을 구축한 것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이 형식적인 성과평가로 이와 같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2015년 아특법 개정 당시 지역에서 '국가운영'을 요구했는데, 지난 5년 동안 국가운영 이 외에 법인화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축적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광주시의 '국가기관 운영' 방안이 지역사회의 의견을 대표하면서 공동된 입장으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이다. 지역사회에서는 5년 전 법인화 논쟁 과정에서 최소 10여 년 동안은 정부가 운영해야 문화전당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5년 동안 문화전당을 실제로 경험한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시민들 중에는 '국가 운영'이 낳은 문제점을 생생하게 실감했다. 이 과

정에서 문화전당의 폐쇄성, 독단성, 비전문성, 경직성, 비효율성 등은 국가의 공무원 조직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위탁운영을 맡은 아시아문화원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조직문화를 갖고 '지역'을 홀대한다는 인식도 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기관 운영이 지역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확고한 대안으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2020년 이후 문화전당 운영 방식이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문화전당 개관 5년의 경험을 통해 학습된 시민과 지역예술인 들의 인식은 문화행정에서 도식적인 논쟁 구도인 '공공=안정성 Vs. 민간=전문성'이라는 이항 대립을 넘어서는 보다 복잡한 갈등 구도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입장에 대해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국가사업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미뤄왔던 광주시가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나 정책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과 법인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 이 외에 제3의 방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결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지역의 문화예술 인력의 참여를 일정 정도 보장하는 민간조직이 문화전당을 운영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금과 같은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이원체계 아래서 서로 간의 위상과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광주시가 입장을 미리 정리해 놓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함께 가자는 방식은 문화적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문화도시의 의미 재구성

지역 주도의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그동안 국가권력의 사업 진행 과정과 조성사업을 의미화하기 위한 지역 내 담론 투쟁의 과정에서 굴절되고 변형된 조성사업의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조성사업은 적어도 "문화가 도시나 국가성장에 있어서의 하위개념이 아닌, 문화가 도시의 중심적인 기능으로 작동하면서 문화생산과 유통, 소비, 창조가 이루어지는 도시, 더 나아가 세계의 다양한 문화적 전통과 현대적 삶의 양식을 재현하고 이를 연구, 교육하며 교와 창조를 통해 문화의 생산과 유통 및 수용이 이루

어지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로부터 출발했다(손경년, 2007: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2015)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하나의 복합문화시설에 의지한 단편적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아니라, 문화가 도시와 시민 삶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재창조하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2007)에서는 문화도시를 '문화가 도시의 중추적 기능이 되고 특징이 되는 도시'로 정의하고, 세부적으로 '인간 본연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구현되는 도시', '시민 간의 개방적 소통과 혁신적 창조가 일상화된 도시', '문화가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는 도시' 등을 강조했다.

이처럼 조성사업은 문화가 지닌 가치와 기능을 도시 공간에 새롭게 실현하기 위한 철학과 원리를 갖고 출발했다. 그러나 국가, 광주시, 지역사회 등이 문화도시를 의미화 위한 담론 투쟁의 과정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와 같은 문화도시의 의미와 구성의 원리는 뒷전에 놓이게 되었다.

문화도시가 추구하는 목표는 단지 규모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스펙터클한 행사를 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광주 정체성을 바로 알고, 광주가 지향했던 역사적 가치를 문화적 맥락에서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우리는 '왜 문화도시이고, 왜 광주이며, 또 왜 아시아인가'에 대한 물음은 어느 순간부터 별개의 문제로 간주되었다. 사업 속에 철학이 부재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는 옛 전남도청의 복원 문제로 개관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평화교류원의 상징적 의미를 되새겨보아야 한다. 광주의 역사적 자산인 광주정신이 조성사업과 만나는 접점인 문화전당의 '민주평화교류원'은 5·18과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으로 상징되는 곳이다. 이곳은 광주의 가치를 문화로 구현해 내는 핵심기관이자, 문화전당의 구동원리가 내재된 공간이다. 문화전당 개관 이후 옛 전남도청 복원문제로 인해 민주평화교류원이 개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성사업을 지탱하는 철학과 가치가 취약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2-63).

광주시는 민주평화교류원 일대의 옛 5·18 공간의 복원문제를 조성사업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사업의 목적성을 복원한다는 취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 특히 '역사'와 '문화'를 상호 분리된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을 경계하고, '5·18의 문화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성사업 종료 이후 기간 연장의 문제 역시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조성사업의 연장 문제를 단지 지연된 5년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인식이다. 국가가 원래 구상한 계획이 완료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사업 기간과 아특법의 유효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지역차원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와 함께 지역이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조성사업 이후의 '문화도시 광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의 역량문제이다.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계속되는 '의존'으로만 비추어질 수 있다. 광주시는 기간 연장을 이루면서 동시에 조성사업 이후 지역 주도의 문화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역 주도' '시민 참여'의 관점에서 문화도시 광주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길러 나갈 필요가 있다. 조성사업의 기간 연장은 곧 지역의 문화역량을 쌓아가는 '축적의 시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시민의 참여 관점에서의 문화거버넌스 운영,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 문화의 가치 확산, 문화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인 문화정책을 미리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

5. 맺음말

최근, 조성사업의 지역적 전환과 연관된 지역 시민사회의 의미 있는 실천들 중의 하나는 2018년 5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이하 정상화 시민연대)의 출범이다. 정상화 시민연대는 조성사업의 중요한 가치와 지향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강조하고,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연대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정상화 시민연대가 제기하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조성사업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시민(시민사회)이 배제되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시민 주체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국가, 광주시,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운영되고 있는 조성사업을 지역의 시민(사회)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정상화 시민연대의 시민 주체를 보다 폭넓은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민 주체는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기능적 참여가 아니라 '문화도시 광주'에서 시민의 삶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에 맞추어져야 한다.

문화도시 기획은 정책적 차원에서 구상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일 계획이 아니라 문화 활동 및 문화행정에 시민참여를 확산해 나감으로써 문화 주권과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한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문화도시에서의 시민 주체는 조성사업의 인프라가 지역의 삶의 발전으로 내재화될 수 있는 실천뿐만 아니라 시민문화운동의 관점에서 시민의 문화활동 및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천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지역의 삶의 공간에서 문화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문화적 권리를 지지하는 운동도 시민 주체를 형성하는 중요하는 분야이다.[3] 특히 지역공동체 기반의 공공미술은 주민들이 예술을 보는 주체임과 동시에 '생산하는' 주체가 되게 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조형준, 2018: 193-194). 주민들이 크고 작은 단위에서 문화적 그룹을 만들고 그곳에서 문화예술적 프로그램을 체험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문화의 소비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 주체의 문화도시의 기반이 되고, 그 자체로 지역의 문화권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문화거버넌스가 지역참여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치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시민성과 역량(능력)을 필요로 한다. 단순한 참여나 목소리의 개입을 넘어 공적 숙의와 토론, 그리고 주체의 책임 있는 역할에 근거한 책임성을 갖춘 시민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그래야만 문화거버넌스는 문화적 삶을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도시 광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도시의 번영과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문화생태계도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 문화활동의 주체, 문화적 계획, 문화적 자원 등이 공동체의 지속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서로의 의존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적 방법이 문화도시 광주에 대한 지역적 전환이다. 지역적 전환

3) 문화민주주의는 단지 예술작품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만이 아니라 문화적 생산수단과 분배에서의 평등한 접근권을 중시하며, 문화적 포용성과 다양성의 추구가 의제화된다.

은 광주 지역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그 공간을 살아가는 주체들의 종합적인 문화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여기서 문화활동은 조성사업 정책전반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적 활동, 그리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정비하는 활동 모두를 포괄한다. 따라서 지역적 전환은 조성사업의 '순환'의 원리에 기초해 문화도시 광주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전략적 모색이며, 주요한 실천영역은 문화도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주체, 활동, 공간을 지역의 관점에서 재배치하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곤, 2010, “옛 전남도청별관 갈등과 ‘5·18’의 의미 탐색”, 『지역사회연구』 제18권 2호, 지역사회학회.

김기곤, 2015, “‘문화도시 광주’의 탄생과 굴절, 그리고 지향”, 『문학들』 통권41, 문학들.

김기곤, 2016, “광주 문화거버넌스 구축의 현실과 과제”, 『광주전남연구』 제6호, 광주전남연구원.

김기곤, 20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년, 성과와 과제”, 『광주전남연구』 제4호, 광주전남연구원.

김기곤, 2018, “문화환경 변화와 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 탐색”, 『광주전남연구』 제12호, 광주전남연구원.

김창훈, 2017, “문화와 민주주의: 개별적이고 사소한 일상에서 출발하는 어떤 문화에 대하여”, 『KDF REPORT』 16호,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데이비드 하비, 2010, “도시에 대한 권리”, 『뉴레프트리뷰』 2월, 도서출판 길.

문화체육관광부, 20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2023)』.

박경섭, 2018, “기억에서 기념비로, 운동에서 역사로: 옛 전남도청 복원 과정에서 드러나는 5·18의 물신화와 성화에 대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제18권 4호, 전남대학교5·18연구소.

손경년, 2007, “문화도시를 만든다”, 『지역문화』 2007년 봄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장섭, 2009, “지식정보사회와 문화 개념의 패러다임 변화”, 『경기문화』 창간호, 경기문화재단.

조형준, 2018, “창조성과 공공성의 긴장”, 박명규·이재열 엮음,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한울아카데미.

토 론 문

‘품격있는 문화도시 광주’ 실현
민선7기 1년 성과와 과제

박 향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광주시는 지난 1월 23일 ‘민선 7기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을 확정.발표하며 ‘품격있는 문화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문화정책 추진방향과 시책발굴을 위해 지난해 8~12월까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체육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문화난장 토크’와 ‘예술의 거리 토론회’ 등 문화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시민 참여를 토대로 문화정책을 수립해 왔다.

광주시는 문화 비전을 ‘품격있는 문화도시 광주’로 정하고, 실천 방안으로는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향유도시’ 등 4대 목표와 ‘매력자원 활용 관광 브랜드화’ 등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문화정책 4대 목표는 ▲지역을 문화적으로 되살리는 문화재생도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향유도시 ▲문화가 성장동력이 되는 문화창조도시 ▲스포츠를 통해 문화생활을 누리는 문화스포츠도시 조성 등이다.

먼저 민선7기 1년 주요 성과를 요약해 보면 문화경제부시장 직제를 신설하여 광주 문화발전의 조직역량을 강화하였고,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해묵은 과제인 ‘광주문학관 건립 확정’,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자원화사업 착수’, ‘상무소각장 내 상무복합커뮤니티타운 조성’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주말 문화행사 프로그램 중 좋은 반응을 얻은 사례로 ‘광주 100년 이야기 시티투어’와 ‘2018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대인예술 야시장 별장’ 등이 있고,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2차 수정계획 수립’ 등 조성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을 주요 성과로 볼 수 있겠다.

[: 문화정책의 비전과 4대 목표, 10대 중점과제]

비전 품격있는 문화도시 광주

4대 목표

1. 지역을 문화적으로 되살리는 문화재생도시
2.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향유도시
3. 문화가 성장 동력이 되는 문화창조도시
4. 스포츠를 통해 문화생활을 누리는 문화스포츠도시

10대 중점과제

지역을 문화적으로 되살리는 문화재생도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향유도시	문화가 성장 동력이 되는 문화창조도시	스포츠를 통해 문화생활을 누리는 문화스포츠도시
● 광주다움이 드러나는 문화적 도시재생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 구축 ● 1자치구 1시립도서관 건립으로 인문도시 기반 구축	● 예술인 복지지원 전용 창구 운영 등 전문 예술인 창작여건 개선 ● 광주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작기반 확충 ● 문화민주주의 환경 조성으로 일상에 문화가 있는 삶의 도시 구현	● 문화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마이스(MICE) 산업 기반 확충으로 관광 활성화 ● 매력자원 활용 관광브랜드화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 및 수영 저변 확대 등 레거시 사업 추진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시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10대 중점과제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지역을 문화적으로 되살리는 문화재생도시' 분야는 ▲광주다움이 드러나는 문화적 도시재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인프라 구축 ▲'1자치구 1시립도서관' 건립으로 인문도시 기반 구축 등으로 '광주다움'이 드러나는 문화적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광주송정역을 '광주다운 관문역사'로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여 광주만의 특색을 담은 역사로 만들고, 역 광장은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 또한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광주다움을 가장 먼저 알릴 수 있는 예술적.건축적 요소를 갖춘 관문형 폴리(이이남 작가.김민국 건축사의 '무등의 빛' 선정)를 광주톨게이트에 설치하여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KTX 운행 중단으로 기능 쇠퇴가 심각한 광주역 일대가 작년 8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광주역을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업 및 마케팅 거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광주역 복합개발 용역'도 착수하였다.

예스러운 주택과 골목길로 명성을 얻고 있는 광주의 '동리단길' 동명동 일대를 아시아문화전당~동명동 문화마을~카페거리~옛 도청 원형복원, 전일빌딩 등과 연결하여 광주만의 멋.맛.흥을 향유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문화마을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충장로, 금남로에 조성할 '케이팝(K-POP) 스타의 거리' 사업도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도심 도보관광 코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전일빌딩을 시민 역사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금년 2월에 착수하여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2020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광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품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문학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13년 동안 표류하였던 '광주문학관 건립'은 2022년까지 건립하기로 지역 문학계와 합의를 도출해 광주만의 특색 있는 문학관 건립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학을 브랜드화 하여 예향 광주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광주시립미술관은 시민 중심 복

합문화예술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과 함께 중외공원 일대를 아시아 예술정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예술체험의 명소로 개발할 예정이다.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2014년 지정된 후 올해 다시 재선정되고, 세계적인 창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인 플랫폼(AMT센터)도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마련과 미디어아트를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갈 컨트롤타워 구축 혁신안을 마련 중에 있다.

그 동안 시립도서관이 없었던 서구(상무지구)와 광산구(하남지구)에 2022년까지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 1자치구 1시립도서관 시대를 열어 인문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기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향유도시'는 ▲전문예술인 창작여건 개선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작기반 확충 ▲일상에 문화가 있는 삶의 도시 구현 등을 주요사업으로 맞춤형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도입해 예술인들의 창작여건 개선과 시민들의 문화향유권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역문화예술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예술인 복지지원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전문예술인들에게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강화로 안정적인 창착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메세나 운동 확대와 성장사다리 구축을 통한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 문화 함양을 위한 '광주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작년 11월에 수립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시민 등에 대한 창작역량 제고와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확대로 시민중심의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민간보조금 지원 혁신안을 마련하여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계의 자생력 확보와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로 문화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화행정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광주시와 문화전당, 유관기관 간 정례회를 통한 문화정책과 행정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문화행정을 추진하였고, 광주 문화.경제 거버넌스 포럼 발족과 우리시와 문

체부 간 아문도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행정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문화가 성장 동력이 되는 문화창조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산업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마이스(MICE) 산업기반 확충으로 관광 활성화 ▲매력자원 활용 관광브랜드화 등으로 문화산업을 광주의 성장 엔진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광주만의 멋과 맛과 흥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화산업 분야의 주요 성과로는 첨단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문화콘텐츠산업 거점 구축을 위한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콘텐츠 창작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융합연구·문화콘텐츠 관련 지식정보의 거점 핵심시설인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의 광주 설립은 문체부의 (가칭)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방안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시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금년 7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문체부 주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공모사업(조선대 해오름관)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게임 산업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관광분야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작년 8월에 지정됨에 따라 제2전시장 신축 등 국제회의 인프라를 집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지역관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립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광주관광 전담기구의 기능 및 조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무등산, 호수생태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 예술, 생태를 포괄하는 광주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착수하였고, 향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과의 연계관광 활성화로 광주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도 기대가 되고 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에 걸맞은 풍부한 문화예술자원과 관광을 창조적으로 융복합한 예술관광을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공연예술 부문은 광엑스포 주제관을 상설공연장인 공연마루로 리모델링하여 매주 상설공연을 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설공연을 지역 대표 공연

브랜드로 육성하고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연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혁신안을 마련하여 시립예술단 경쟁력 강화와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우수한 작품 공연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중추적인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문화예술회관의 노후된 공연장 등을 리모델링하여 관람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 중에 있다.

그리고 미향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을 선정(광주주먹밥, 광주상추튀김, 무등산보리밥)하여 이중 광주주먹밥을 올해 대표음식 상품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전국 최초로 공연과 이야기가 결합된 '광주 100년 이야기'와 '오월의 버스' 시티투어를 개발해 광주만의 특색 있는 시티투어를 운영하여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며 광주수영대회 기간에는 수영대회 특별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다.

'스포츠를 통해 문화생활을 누리는 문화스포츠도시' 조성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성공적 개최 및 수영 저번 확대 등 레거시 사업 추진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시민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북한 선수단.응원단 참가 등 대회 붐 조성과 평화대회 개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시민들이 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우선 현 정부의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채택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공약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 8월에 발표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2차 수정계획'에 따라 7대 문화권을 5대 문화권으로 개편하여 지자체 사업인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분야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5대 문화권 권역별로 핵심사업 1~2개를 선별하여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우리시와 문체부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문화전당 운영방식에 대해 전부위탁 시기를 5년 연장하는 아특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5대 문화권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아특회계 지자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율 상향(50→70%)과 국비 한도액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금년 3월에는 5.18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과 맞선 5.18 마지막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80년 5월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는 마스터플랜을 확정하는 등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도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대통령 지역공약인 아시아문화전당과 5대 문화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성사업 종료기한('23년)까지 핵심사업 등을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통해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안이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문체부 등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조성사업의 결실이 광주시민과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선 7기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품격있는 문화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도시 곳곳을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문화산실로 조성하여 문화가 시민의 일상이 되고 역사가 되는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위상에 걸맞도록 문화전당의 역할 강화와 취약한 문화기반 시설 및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문화를 향유 개념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일자리와 상품.브랜드.산업으로 연결시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견인하는 경제엔진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선순환의 과정을 통해 광주가 문화적으로 디자인되고 운영되며 문화가 시민들의 일상이 되는 진정한 문화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발표 ①에 대한 답변 및 의견

김 윤 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1. 영국은 문화 혜택의 기회 균등, 독일은 국외 문화교류까지 지역 연방정부가 수행, 프랑스는 문화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문화 매개자 정책 추구 등 각 국의 문화정책은 공동체의 철학을 담고 있다. 한국, 그리고 광주가 추구하는 정책 철학은 무엇인가?

한국의 문화정책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의 예술적 가치 지향에서 경제적 가치 지향으로 그리고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의 사회적 가치 지향으로 그 정책의 중점이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의 문화정책은 문화의 예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의 조화와 균형 발전을 통해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를 문화비전으로 국가 공동체의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할 문화정책 영역도 지향가치와 연계하여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예술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조화로운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영역으로 **문화교육** 정책이, 문화의 내재적 가치 제고라는 측면에서 **문화창조** 정책이, 문화의 경제적 가치 제고라는 측면에서 **문화경제** 정책이, 문화의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측면에서 **문화복지** 정책이, 공공 및 상업 공간이나 미디어를 대상으로 문화의 예술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 제고의 기반을 제공하는 **문화환경**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문화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변화는 대중문화의 팽창, 전통과 현대의 재창조, 인터넷 등 새로운 문화 공간의 등장,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 문화・관광・체육의 상호 연계, 문화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팽창, 중앙과 지역 간 문화 격차, 소외 계층이나 지역의 문화적 배제,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와 공급, 이주민 확산에 따른 문화 다양성 문제, 자연 파괴를 딛고 선 인류 문명에 의한 위험사회 경고 등 21세기가 직면한 문제 해결의 정책 대안으로 '문화'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2. 광주시 문화정책의 철학은?

광주광역시 민선 7기의 문화철학도 당연히 광주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품격 있는 문화도시 광주>**를 시정 목표로 ①지역을 문화적으로 되살리는 문화재생 도시, ②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향유 도시, ③문화가 성장 동력이 되는 문화창조 도시, ④스포츠를 통해 문화생활을 누리는 문화스포츠 도시 등 4대 시정방향 그리고 10개 시정과제, 22개 세부과제 추진을 통해 <도시 곳곳을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문화의 산실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 자체가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시정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광주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민선 7기 4대 시정 방향별 10대 시정과제 추진성과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야 공감하고, 공감해야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광주문화재단의 '문화 도매상 역할' 그대로 둘 것인가?

광주문화재단이 도매상 역할만 해야 하는 지?, 소매상 역할만 해야 하는 지? 아니면 둘 다 해야 하는 지? 아니면 몇 개만 특화해서 팔아야 하는 지는 문화재단의 설립 근거인 조례상 설립 목적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은 첫째,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 확대, 둘째, 시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 셋째, 문화예술진흥정책 개발을 통한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현입니다. 한마디로 유네스코가 제시하고 우리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규정한 문화정책의 이념인 문화의 민주화(향유)와 문화 민주주의(참여)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창조도시 구현에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세계 속의 광주문화를 창조하는 문화협력 플랫폼 구현>을 민선 7기 경영비전으로 설정하여 광주광역시와 시민사회문화단체 간 소통과 매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본래적 가치 확산을 통한 지역 문화발전 견인을 위해, 창의력과 상상력 향상을 목표로,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이 문화예술 창조 활동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매개하여, 지역의 문화자본 증가, 문화 정체성 강화, **지역민들의 창의성과 표현의 다양성 촉진** 등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경제적 가치 확산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해, 고용과 성장을 목표로,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이 문화산업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매개하여, 지역의 경제자본 증가, 지역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지역 기반 기업의 문화경영 및 마케팅 강화, 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성장 잠재력 제고, 지역의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 포용 견인을 위해 신뢰와 포용을 정책 목표로, 지역의 공동체 정신이 문화교육, 문화복지, 문화환경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개하여, 지역의 사회자본 증가, 지역민의 건강증진, 지역민의 소통 능력 향상, **지역민의 공동체 정신 회복**, 지역의 도시재생 및 환경개선 등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 가치 확산을 통한 지역의 열린 공동체 견인을 위해, 이해와 존중을 정책 목표로, **지역의 고유문화가 타 지역 및 이주민 문화와의 교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개하여, 지역의 창조 자본 증가, 지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 증진, 지역민의 새 문화 창조 능력 고양, 지역민의 열린 문화 창달, 지역민의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 제고 등을 기하고 있습니다.

4. 주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인프라 '소규모 다핵화 활용 방안' 고려해볼 만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성은 지역예술가들이 주민들과 지역문화 활동가들이 함께 생활권 내에서 쉽고 즐겁게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 생활문화** 창작공간이 제공되어 이를 통해 주민과 도시의 창조성이 배가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7년 광주 기초예술 실태조사에 의하면 광주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 여건은 작업 또는 연습공간을 포함한 자체 공간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체 사무실만 갖고 있는 경우에도 대표가 거의 대부분 사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연습공간을 갖고 있는 단체는 회비나 수익금, 회원들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고, 이경우도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잦은 이사를 하는 상황으로 장르 특성에 맞는 창작 공간 규모, 구조, 기능 등을 꿈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창작공간을

갖지 못한 예술가나 단체는 집이나 카페, 교회나 학원 강의실 또는 타 단체 연습 공간 등을 전전하며 창작 공간을 대여하고 있어 창작에 집중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예술가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주민과 도시의 창조성을 배가 시키는 것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5개구와 95개 행정동이 주민・지역활동가・문화기획자・예술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동네 소극장, 우리 동네 갤러리, 우리 동네 도서관 등을 공・폐가 매입으로 조성하여 예술 단체나 예술가 또는 청년 공연 기획자나 큐레이터, 사서 등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다면 창작과 향유의 실질적 매개 기능을 회복하여 주민 생활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풀뿌리 문화도시 조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5. 문화정책의 개방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문화정책의 개방성은 거버넌스 관점의 지역 문화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와 광주시 의회, 문화 기관·단체 24개, 경제 기관·단체 40개, 대학 8개 등 7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문화와 경제계의 상생 협력을 위한 '광주 문화・경제 거버넌스 포럼'을 발족한 바도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차원에서 운영 가능한 거버넌스 차원의 지역문화정책을 예시해 보면, 문화기관・문화원・지역대학・예술인・시민들과는 광주학 연구・광주학 총서 발간・광주학 통합 아카이브 구축・광주학 콜로키움 운영, 광주전남관광협회와는 광주전남 연계 관광 프로그램・지역연계 축제 프로그램 운영, 전국 광역문화재단 들과는 광역 문화정보 네트워크 구축・프로젝트별 네트워크 구축 운영, 광주전남혁신도시 문화기관과는 광주전남 지역문화 특화 프로젝트 운영,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과는 지역문화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운영, 지역 사회복지 단체와는 생활문화 나눔 프로젝트 운영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별첨>

민선 7기, 4대 문화시정 방향별 10대 문화시정 과제 광주문화재단 추진 성과

문화시정 방향 1. 지역을 문화적으로 되살리는 문화재생 도시

10대 시정과제	주요 성과
① 광주다움이 드러나는 문화적 도시 재생 ②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 구축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 2019아시아문화포럼 운영(2019.10) - 광주 문화기관 협의회 운영 협력 강화(문화전당 포함 15개 기관 참여) · 운영위원회 12회, 대표자 회의 2회 개최 및 워크숍·포럼 공동추진 · 기관 간 협력사업 10건 추진 - 2018아시아문학인 교류의 장 운영(2018.10) - 2018전국문화활동가대회 유치 운영(2018.10) ②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조성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재선정 (2019. 5.)** · 유네스코가 제시한 '문화적 창의적 자산을 활용한 지속적인 도시발전의 도모'를 위해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디어아트 발전을 위한 전략과 구조적 접근, 그리고 계획 등에 대한 헌신 노력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4년 12월 이후 첫 번째 재선정됨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 · (2018유네스코 창의도시 정책포럼) 국내·외 창의도시 관련 전문가 11명 참여, 지속가능한 창의도시의 정책 방향 수립 · 미디어아트 분야 '부의장도시'로서 창의도시 모니터링, 연례총회 참석 등 창의도시 간 네트워크 활동 강화 -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단계별(3단계) 전략 사업 추진 지원 · 1단계 미디어아트 관광레저 기반구축사업 · 2단계 AMT 조성 기반 마련 (완료) · 3단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기반 마련 -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통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외연 확대 · 국내외 참여작가 7개국 61명 참여, 서울·부산 연동 전시를 통한 외연 확대 · 예술과 과학기술의 접목이 돋보이는 새로운 융복합 전시의 새로운 유형 제시 -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의 운영 시스템 안정화 · 전국 문화재단 최초로 교육부 선정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18.12.)

문화시정 방향 2.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향유 도시

10대 시정과제	주요 성과
③인문도시 기반구축	① 문화예술 작은 도서관 운영 - 연간 이용인원 5천 여명 - 연중 문화 독서 프러그램 운영(프로그램 참여자 수 1천여명) ② 광주학 아카이브 운영 - 광주관련 도서 등 자료 2천여점 수집 - 광주학 콜로키움 등 운영 - 광주학자료 기증 캠페인 전개(5.18기록관 및 민속박물관 공동) ③ 광주학 총서 시리즈 발간 및 연구 소모임 지원 - 광주100년 등 광주학 총서 9권 발간 및 2019년 추가 발간 예정 - 광주 누정 총서 6권 발간 및 2019년 4권 추가 발간 예정 - 광주학 연구 소모임 4개 팀 선정 지원 및 연말 포럼 및 보고서 발간 ④ 미디어아트아카이브 운영 - 디지털 및 실물자료 1천여점 - 워크숍 등 프로그램 운영(연간 2만여명 관람)
④예술인복지 지원 전용창구 운영 등 전문예술인 창작여건개선	① 예술인 복지지원사업 추진으로 예술인복지지원 전용 창구 운영 - 광주예술인 400명 대상으로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예술활동증명’ 발급 지원 (2018년 : 1,023명, 2019년 66명) ② 문화예술 전문 창작 지원(2018년) : 217개 단체 2,728백만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6개단체 638백만원 -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 7개 단체 372백만원 - 지역특화 문화거점지원 17개 단체 510백만원 - 문화예술 교류지원 11개 단체 186백만원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166개 단체 · 개인 850백만원 - 야외상설브랜드공연 창작지원 10개 단체 172백만원 ③ 문화메세나운동 확대 - 문화예술단체 자생력 확보 프로젝트 실현 · 펀딩프로젝트 만세만세 만(萬)만(滿)계 추진으로 14개 단체(인) 공동 홍보·모금 활동을 통해 108백만원 지원(매칭액 54/모금액 54) - 파급력 있는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 및 모금 채널 확보 · 네이버 해피빈(13개단체)과 다음 스토리펀딩(1개단체) 등 온라인 모금 전개를 통한 25백만원 모금 - 기업의 사회공헌 및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메세나 추진 · 한국메세나협회 매칭펀드 7천만원과 지역기업 4개사 기부금 7천만원을 확보하여 140백만원을 2명의 미디어작가 창작활동 지원 - 시민대상 문화보둠 10000운동 전개로 현재 2019.5.기준 1,216명 가입, 23,831,013원 모금 (총259,408,597원 모금) - 해피빈 등록기업 ‘신한은행’ 등 기업 기부 문화 확대(신한은행 9백만원 지원으로 2개 예술단체 지원)

	④ 지역문화예술 특성화(레지던스) 지원으로 창작 공간 확대 - 4개사업, 201개 단체, 1,917백만원 지원을 통한 예술창작 활성화 및 시민문화 향유권 확대 ⑤ 미디어아트 창의랩 운영 : 2개팀 1억원
⑤광주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작기반확충	①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강화 및 활성화 지원 - 토요문화학교운영,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창의예술학교, 예술동아리 교육 운영 지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총 99건 (토요:42건, 지특:20건, 창의:4건, 동아리:33건) - 보조금사업 정산 간소화 추진 : e나라시스템 등록으로 간소화 ② 문화예술교육센터 역할 및 네트워크 확장 노력 -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 수립 및 시민대상 프로그램 추진 ⇒ 문화예술교육5개년(2018~2022) 계획 수립 ⇒ 시민대상 문화예술교육축제 및 50~60대 여성대상 경자씨와 재봉틀 등 시민 프로그램 운영 ③ 지역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확장 노력 - 창의예술교육연구소 : 교과연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예술인력 및 기관 간 연계 강화 : 워크숍, 실무협의회 운영 등
⑥문화민주주의 환경조성으로 일상에 문화가 있는 삶의 도시 구현	① 생활문화예술 지원(2018) : 196개 단체 454백만원 - 생활문화 활동단체 지원 66개 단체 314백만원 -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 130개 단체 140백만원 ②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 광주거주 이주민-지역민 연계 ‘무지개다리’사업 운영 · 이주민과 지역민 화합의 장 ‘문화다양성 확산 페스티벌’ 개최 · 고려인-지역민 청소년이 함께하는 ‘고려인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 이주민과 지역민이 공동 진행하는 라디오방송 ‘채널우리누리’ -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 · 광주시 취약계층 67,156명에게 문화누리카드 제공으로 문화복지 실현 ·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문화장터’ 운영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편의 제공 · 문화누리카드 이용촉진 프로그램 ‘문화누리카드로 누리자!’ 운영 ③ 연중문화행사, 거리축제가 열리는 문화난장 추진 - 공연과 체험의 문화난장 ‘광주프린지페스티벌’과 국내외 유명 거리공연팀 초청한 ‘ACC프린지인터내셔널’ 성공 개최로 문화전당 활성화 ▶ 광주프린지페스티벌 - (시기) ’18. 4 .~ 11. (매주 토, 총28회) /(장소) 문화전당 등 총 11개소 - (관객수) 총 430,100명 관람 / (참여단체 및 참여자수) 총 718팀 3,386명 - (내 용) 문화예술공연, 체험프로그램, 자유버스킹, 지역문화행사 연계 등 ▶ ACC프린지인터내셔널 - (시기) ’18.9.28 .~ 9.30.(총 4일간) / (장소) 문화전당 일대 - (참여단체수) 국·내외 14개 단체 (해외 4, 국내 10) - (공연수 및 예술인 참여) 총 39회 공연, 87명 예술인 참여

문화시정 방향 3. 문화가 성장 동력이 되는 문화창조 도시

10대 시정과제	주요 성과
⑦문화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① 문화이모작 〈전지적 동네시점〉 운영으로 문화매개자 인력 30명 양성 - 공동체를 통해 문화적 도시재생의 가치를 실현할 문화매개자 양성 - 지역문화진흥원 공모사업 선정 및 교부결정(34,000천원) - 동명동 외 2개 마을 참여자 대상 워크숍+멘토+모둠활동 교육 ② 창의적인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 2018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 사업 운영 · 자기주도프로젝트 14명 및 기관·시설 배치 9명 실습 · 통합리더과정 우수교육생 3명 교육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상 수상 ③ 1인 미디어 창작자 지원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 - 유튜브 채널 활성화 및 청년 문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인 크리에이터 30명 양성 ④ '청년문화일자리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 지원단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일자리 현황점검, 피드백 등 실시 - '청년문화일자리 정책 라운드테이블' 개최(2018.7.4., 20명 참석) ⑤ 청년문화생태계 유지를 위한 청년 주도의 교류행사 마련 - 전국 청년이 함께 문화생태계의 자생력을 위한 청년문화캠프 '전국문화해적대집결' 개최(2018. 8. 25.(토)~26.(일)) ⑥ 실태조사와 전문가 정책보고를 근간으로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 청년문화일자리 시범사업을 통한 4명 청년인력 배출 - 2020년까지 일자리 예산 328백만원 확보,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 사업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단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20개 창출 및 인력배치
⑧마이스산업기반확충으로 관광 활성화	① 무등산권 누정가사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풍류남도 나들이' 추진 - (누가풍류처사) 20주 운영, 13,000여명 참석 - (풍류달빛공연) 6회 운영, 2,400명 - (누정문화기행단) 18회 운영 460명 / (누정문화제) 6,000명 참여 - 누정총서 시리즈(6권) 발간, 마을공동체연계사업 운영, 탐방로 조성 ② 무등산권 자연·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무등울림 성공적 개최 - 유관기관·주민자치회·학교·상인회 등과 협력, 市 무형문화재의 대 시민 활동 강화로 시민주도형 무등울림 개최 성공 (30개 프로그램, 70,694명 참여)
⑨매력자원 활용 관광 브랜드화	①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사업 추진 - 창작 관현악곡 위촉 4개 제작, 국내·외 공연(총7회- 국내5, 국외 2) - 창작 관현악곡 공모 작품 선정(4개 작품) ▶ 총 관람객 : 8,947명 / 참여예술인 : 643명 - 님을 위한 행진곡 창작 뮤지컬 제작을 위한 국비9억원 확보로 2019년 총18억원 예산 확보 및 편성 ②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개발 및 활성화

	- (토요상설공연) 연간 41회 운영, 관람객 12,396명 - (일요상설공연) 연간 31회 운영, 관람객 16,000명 - (특별기획행사) 도올 김용옥 인문학 강의, 관람객 8,200명 ⇒ '전통문화관' 2018 코리아 유니크 베뉴 선정 ③ 정율성 등 광주 연고 문화예술인 등 연계 도시 브랜드 강화 - 광주지역 출신 정율성 선생을 매개로 한 '정율성음악축제' 추진으로 음악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한·중 문화교류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 ▶ 중국 취안저우 방문공연(2회), 찾아가는 정율성 음악회(총10회) ▶ 정율성＆윤이상교류음악회(2회), 광주성악콩쿠르(105명참여), 정율성 심포지엄(1회) ④ 5 · 18 상설공연 지원 : 4개 단체 4개 작품, 총 3억원 ⑤ 광주문화예술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향유 기반 마련(2019년)

문화시정 방향 4. 스포츠를 통해 문화생활을 누리는 문화스포츠 도시

10대 시정과제	주요 성과(2018. ~ 2019.5.)
⑩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지원을 위한 문화행사	① 수영대회 성공 기원, 즐길거리 가득!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개최 - 기간/장소 : 7. 13. ~ 8. 17./ 5·18 민주광장, 경기장, 선수촌 등(총6회) ② 정율성을 테마로 한 '광주 근대 음악의 뿌리를 찾아서' 추진 - 기간/장소 : 7. 13. ~ 8. 17./ 오웬기념각 (총5회) ③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연계 미디어아트월 및 작품 제작 - 기간/장소 : 7. ~ 8. / 선수촌 일대 ④ 전통문화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연계프로그램 '전통미를 더하다' - 전통문화관 야간 개장(한지 등(燈)축제, 설치미술, 찻집 운영 등/ 15회) -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참가자를 위한 토요상설공연(3회) - 얼씨구 광주 국악 공연 (10회) - 부채 만들기 체험, 전통차·옹기 등 전시프로그램(15회)

패널
토 론 문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의 현황과 제안내용 비교 및 제언

정 진 삼 ((사)광주장애인문화협회장)

광주광역시는 정책발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수렴하여 1월 23일 광주시장이 발표한 문화정책 추진방향을 보면 문화비전을 '품격있는 문화도시 광주'와 실천방안으로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향유도시'로 정하여 4대 목표와 10대 중점과제를 집약하여 발표하였다.

◎ 광주광역시 문화정책 4대 목표

1. 지역을 문화적으로 되살리는 **문화재생도시**
2.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향유도시**
3. 문화가 성장 동력이 되는 **문화창조도시**
4. 스포츠를 통해 문화생활을 누리는 **문화스포츠도시**

◎ 광주광역시 문화정책 10대 중점과제

1. 광주다움이 드러나는 **문화적 도시재생**(광주문화마을 조성 등)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 구축**(문학관, 국악원, 역사박물관 등)
3. 1자치구 1시립도서관 건립으로 **인문도시 기반 구축**(시립도서관 건립 등)
4. 예술인 복지지원 전용창구 운영 **전문예술인 창작여건 개선**(메세나 운동, 성장사다리 구축 등)
5. 광주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시민의 **문화예술 창작기반 확충**(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확대)
6. 문화민주주의 환경조성으로 일상에 **문화가 있는 삶의 도시 구현**(문화난장 토크, 소통 등)
7. 문화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창・제작, 사업화 마케팅 지원)
8. 마이스(MICE) 산업기반 확충으로 **관광 활성화**(김대중센터제2전시장,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등)
9. 매력자원 활용 **관광 브랜드화**(상설공연, 광주문화예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10.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및 수영 저변확대 **레거시 사업 추진** (수영진흥센터 건립)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문화정책연대(42개 단체)에서 제안한 문화정책 방향 및 10대 핵심 정책은 자율, 다양성, 협치가 근간이 되는 광주시 문화 행정의 전면적인 혁신과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이 실현되는 도시 및 시민문화권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문화적 삶이 구현되는 도시를 표방하는 의제로 한 내용을 담아 제안하였다.

◎ 문화정책연대 10대 핵심 정책 제안내용

1. 문화부시장제 도입
2. 문화 협치 조례 제정
3. 문화 개방형 공직자 확대 및 문화기관 이사회 구성 개선
4. 문화예술인 사회혁신 일자리 창출
5. 문화예술인 기본 소득 보장 조례 제정
6. 문화예술지원 보조금 사업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7. 광주 예술가의 집 건립
8. 광주 문화행사 홍보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9. 각 구별 청년문화의 집 건립
10. 광주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

위와 같은 제안에 이용섭 당선인 신분의 답변(동의, 반대, 유보)은 '문화 개방형 공직자 확대 및 문화기관 이사회 구성 개선'과 '문화예술인 기본 소득 보장 조례 제정' 2개의 제안에 '유보'의견이었고 8개 제안 내용에는 '동의'를 표하였다.

제안내용과 문화정책 10대 중점과제를 비교해 보면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 해석하면 대동소이할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적시한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협치 조례'의 제안내용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고 과연 지난해 문화정책연대가 제안한 핵심정책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용섭 시장은 발표 당시 "문화정책은 완성본이 아니고 문화, 예술, 체육분야 단체와 전문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진행형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추가보완을 약속한 만큼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집약하여 적극적인 제안과 요구로 광주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특히 공간적, 경제적인 여건이 제약되어 문화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든 문화소외계층(어르신, 장애인, 저소득가정, 다문화,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인권도시 광주'가 선도적으로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정책에 보다 더 큰 관심으로 구체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제 언**(발제문 등에 근거)

1. 도시문화축제(보여주기 행정, 사람 모아내기 행정, 단체장의 정치적 레토릭 등 프린지페스티벌 20여 억 예산 거리축제에 집행) -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예산의 선택과 집중, 참여 확대**
2. 공무원 담당부서 평균 재직기간 1년 미만 – **지속가능 체제와 인수인계 등으로 전환요구 됨.**
3. 문화재단의 '문화 도매상 역할' - **체계정립을 통한 문화예술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함.**
4. 보조금은 기획서 잘 쓰고 실적 좋은 단체들의 사냥감(공공예산은 텃밭에 잠재된 에너지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편) - **배분원칙을 세워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 아시아문화전당 프로그램 또한 획기적 조어를 차용한 첨단프로그램이 아니면 안 됨 - **문화전당의 효과를 광주 도시전역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

광주시의 문화정책도 평등, 공정, 향유를 지향해야하고 이러한 가치는 정책설계 책임자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될 보편적 가치로 본다. 민선 7기 문화정책도 광주시의 구성원이며 누구라도 문화권리를 누려야할 문화예술인의 가치가 훼손당하지 않고 '품격있는 문화도시 광주'에서 공존과 향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주도의 문화행정 협치가 문화도시 광주의 품격이다.

이 현 미 (광주민예총 사무처장)

민선 7기 광주시의 문화정책을 요약하면 '품격 있는 문화도시 광주'를 '시민 주도의 문화행정 협치'로 맏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문화도시란 문화가 도시의 중추적 기능이자 특징이며 성장의 동력이 문화가 되는 도시이다.

이는 문화행정가와 문화형성자인 예술가, 향유집단이며 소비자인 시민, 산업과 행정, 시민, 창작가를 매개하는 문화기획자들의 협치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협치는 민관정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의견을 나눠 일정한 결론에 이르고 그 결론을 각자의 역할에 의해 달성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정책에 있어 광주의 협치는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일까?

광주시가 책임 잇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협치의 체계를 가동하고 잇는가? 문화거버넌스는 주체간의 권한이 균점되지 않고 숙의와 토론이 결핍되었으며, 정책 과정에 한정된 행정위주의 위계적 파트너 쉽이 주된 형태였다.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2019년 4월 광주시 주도로 구성된 '광주 문화경제거버넌스 포럼'이다.

처음 실무자 접촉시에는 문화관련 국가기관 6개, 지방기관 6개, 민간단체5개로 구성되었고 1차례 회의와 대표자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실무자회의에서는 주로 광주시의 2019년 문화정책과 사업에 대한 공유차원이었고 이후 대표자 회의에서 구체화 되는 수순이었다. 문체부의 사업승인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고 마치 실무자회의가 협치의 구색을 맞추는 인상이었다.

문화거버넌스를 경제분야까지 아울러 구성한다고 했고 대표자회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2주후로 예정된 대표자 회의는 연기되었고 추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런데 메일로 '광주 문화경제거버넌스 포럼'의 초청장이 도착하였다. 71개 기관.단체 대표(문화24, 경제39, 대학8)로 구성하고 경제부시장이 당연직 회장

이 되고 문화정책실장이 실무책임이며 회의는 분기에 한번 개최되는 기구로 발족한 것이다.

단 한차례의 회의 후 광주시 독자적인 수순으로 탄생한 문화거버넌스다. 탄생 자체가 협치의 기본을 파괴한 광주시 일방적인 이 거버넌스는 과연 거버넌스인가 ?

협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자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가치이다. 주체를 바로 세우고 그 주체 간 협의와 숙의를 통해 정책을 실현해 가야 지속가능함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행정은 협치에 대한 이해가 없다. 중앙정부의 협치 기조에 형식적 요건만 맞추고 있는 것이다. 문화는 다수가 오랜기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행정이 밀어부쳐 일방적으로 이식하는 것이 문화가 될 수 없다.

이 간단한 원리만 안다 하여도 이런 횡행을 일삼지 않을 것인데 광주시는 여전히 행정가 마인드로 협치를 이해하고 있다. 협치는 관.민,정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관건이며 요체이다. 주체가 바로 서지 않는 어떤 일도 제 길을 가지 못한다.

광주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이미 80년 5월에 검증한 도시이다. 시민은 이미 가장 큰 인문가치인 인간존엄을 삶에서 실천 검증한 주체이다. 협치의 모델을 80년 이미 실행해 본 도시이다. 그 어느 도시 보다 협치를 이뤄낼 수 있는 곳이 광주다.

그 어떤 일보다 문화도시의 주체를 세우는 일에 먼저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인사가 만사다. 칼자루를 쥔 광주시가 칼자루의 방향을 시민으로 돌려야 문화도시는 바르게 길을 잡는 것이다.

시민주도의 문화행정 협치가 문화도시 광주의 품격이다.

광주 문화생태계는 건강한가?

박 홍 근(나무심는 건축인 운영위원장, 건축사)

생물과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태계의 개념은 여기저기에 붙어져 개념화되고 있다. 문화환경을 종합해서 문화생태계라하자.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온전해야 하듯이 문화융성과 문화향유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문화생태계가 건강해야 한다.

광주의 문화생태계는 어떠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만들겠다고 한지가 15년째 되어가고 있으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건립 이왼 거의 모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김기곤 박사의 자료와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과언 2023년까지 조성사업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문화생태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신도시 조성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광주시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전략적 사고와 치밀한 계획, 지속적 실행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는 있었는지 묻는다. 지역시민사회는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과 광주의 이익의 경중을 구분하여 활동했는지, 어떤 사유와 전략적 행동과 주장을 해왔는가? 그런데 그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개인적으로 격하게 아쉽다.

중앙정부에서 볼 때 광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일까? 수많은 사업 중 하나일 것이고, ACC는 완성되었으나 건축과정에서부터 옛 전남도청 별관문제, 지금은 복원문제만 이슈화 되었지 ACC 시작의 철학, 조직, 운영, 예산 등등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의 이슈화가 극히 약했다. 물론 그 이외 사업에 대해서도 큰 이슈화가 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광주시와 이 지역 시민사회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다.

옛 전남도청 별관문제로 문화전당의 외부마당이 민주광장과 단절되어 기능이 약화되었고, 옛 본관 원형복원관련으로 문주평화교류원은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철거의 기로에 서 있다. 전당 기능의 기본 철학이 뿌리체 흔들리고 있다. 복원에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옛 전남도청 일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견은 없다. 필자도 당시 광주에 함

께 있었다. 이해당사자간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그간의 수많은 결정들을 번복하면서 제자리걸음만 한다면 언제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완성될 수 있을까? 시간도, 예산도, 여론도, 시회의 흐름도 우리 편인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80년 당시로 완전한 복원의 이슈에 함몰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원형복원은 불가능하다. 약간의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명분보다는 실질적 지혜가 필요하다. 전당의 기본철학, 운영조직, 국비확보, 조성사업에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을 위해 외치듯이 그 이상으로 외쳐야 할 때라 생각한다. 광주는 너무나 큰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중앙정부야 수많은 사업 중 하나지만, 광주에서는 역대 최대의 중앙정부 사업이다. 지역에서 이를 잘 활용할 전략과 전술이 있었는지.... 15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를 조정할 광주시 능력 발휘가 아쉽다. 목소리 쎈(?) 단체의 눈치만 보다가 정치적 판단과 선거 전략적 판단만 한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지역 시민사회는 뒷담화로는 특정단체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언론도, 지역 정치권도, 전문가들도, 거의 모두가 앞에선 침묵이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렸고, 앞으로도 그리될 것 같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ACC준공과 그 상태에서 콘텐츠 운영, 옛 전남도청 일원 복원정도 사업이왼 더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이 때에 '지역적 전환'이 가능한가? 글쎄다. 아직 기초체력도 부족해 보인다. 광주시의 문화정책은 어떠한가? '민선 7기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의 비전은 '품격 있는 문화도시 광주' 다. '품격'을 어떻게 규정화 할 수 있을까? 실천방안의 주요이슈는 문화재생, 문화향유, 문화창조, 문화스포츠다. 문화적 장소와 공간을 만들고,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창출과 관광브렌드화 하겠다는 실천방안으로 이해한다.

좋다. 광주의 문화생태계를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되기에 무언가 잘 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문화생태계의 하나의 요소다. 나머진 광주시와 지역사회에서 자양분 역할을 하여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문화재생을 통하여 도시나 건축공간이 문화자산이 되게 해야 한다. 알아야 보이고, 향유할 수 있으므로 시민교육은 물론 어린학생 때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 문화가 경제가 되게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앞으로 실천을 하겠다고 한다.

질문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서 ACC 건축과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이외 어떤 사업이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논의 중인 것 말고,) 원형복원 이슈로 어떤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가?

질문2. 광주시는 광주문화생태계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가? 愚問이지만 민선7기 문화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관광브랜드화, 시민의 일상이 문화향유가 되는 선순환의 문화생태계가 되리라 보는가? 혹시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있는가?

광주시 그리고 시민사회의 동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윤 준 혁(상상실현네트워크 사무처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고, 지역 균형의 발전과 국가의 문화적 위상을 강화하며, 문화 전반에 관련한 연구와 콘텐츠 창제작을 기반으로 미래형 도시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역사의 현장이자 민주화의 성지였던 도청 별관을 허물면서까지 아시아를 위해 내주었지만 암울했던 보수정부 10년의 무관심과 견제를 지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민연대의 애원과 부름은 여전히 정부의 외면과 방만 사이에 있다.

지난 4월 17일에 열렸던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사회 집담회에서는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광주시가 좀 더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견인하려는 시도가 미흡하다고 평가 내렸다. 특히 간담회 직후 시민사회가 요청한 광주시장 면담요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물론이고, 조성사업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① 광주시가 중앙정부를 적극 견인하고 있는가?

2004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까지 진행되는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5조 2,912억 원) 대비 2018년까지 집행된 예산은 1조 4,528억 원으로 계획 대비 27.5%만 투입되었다. 또한 개관 이후 문화전당의 운영 예산의 감소도 뚜렷해 보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를 맞아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전담팀이 꾸려졌다곤 하나 문화연구, 콘텐츠 개발, 창제작, 공연, 문화콘텐츠 홍보 등의 성과는 전무하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 문화를 위해 앞마당을 내주었지만 정작 효용도 없고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국책 사업의 성격상 광주시의 중앙정부 견인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② 법인 일원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020년 4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문화전당의 운영방식이 '일부 위탁'에서 '전부 위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하지만 개관 이후의 활동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지 의문이며, 그 과정이나 기준도 모호하고 불투명하다. 만약 전당의 운영주체가 법인으로 일원화가 된다면 그동안 국비로 충당되던 운영비를 앞으로는 광주시가 감당해야 하는데 광주시의 예산으로 볼 때 감당할만한 예산도 아니며, 부담하더라도 오롯이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수익사업 등이 필요한 법인으로의 일원화는 전당의 문화적 공공성의 축소를 야기해 본래의 설립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③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광주시는 문체부 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문화전당 운영방식에 대해 5년 연장하는 아특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전당의 기능에 따른 운영비로 분석해 볼 때 임시방편일 뿐 5년 뒤에는 똑같은 예산 부족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연장에 대한 개정안 발의가 아닌 시민사회와 함께 '조성사업'을 지역의 담론으로 만들어 정부와 협상할 필요가 있다. 전당의 위상과 기능을 되찾고 그것을 지원 및 운영하기 위한 지역적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문화전당 전담 부서인 문체부와 추진단은 전당의 책임과 문제를 광주시에게 전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광주시, 시민사회 등이 모여 하나 된 목소리로 대화를 요청할 것을 지시 내리고 있다. 매우 치욕스러운 처사이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전당과 관련한 지자체, 의회, 시민사회의 전당과 관련한 지역 대통합을 이끌어 낼 좋은 명분이 생긴 것이라 본다.

광주시와 시민사회는 '조성사업'이라는 직면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하는 동행길에 올랐다. 눈앞에 문제를 두고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하나 된 목소리로 광주의 문제를 함께하는 동지가 될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비매품>**
2019생통포럼(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 포럼) **자료집**

지은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펴낸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박병주
펴낸일 . 2019. 6. 26
인 쇄 .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19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